

# 설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시행

### 국토부,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교통소통 강화·이동 편의 확대 등 5개 추진과제 설정 이용객 증가 대비 버스 등 운행횟수·좌석 평시대비 늘려 폭설·결빙 대비 도로 순찰·취약지구 제설제 살포 강화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교통소통 상황 사고발생 등 도로 이용 정보를 모바일 앱·도로 전광판·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간(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 표시) 관리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 고속도로 순환영상을 시로 분석해 법규 위반차량(버스·지장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에 대한 공익신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린다.

폭설·결빙에 대비해 도로 순찰 및 취약지구에 대한 제설제 예비살포·재살포를 강화하고, 결빙 위험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20~50%)하며 내비게이션(길 도우미)을 통해 도로상황을 위험정보도 미리 안내한다.

폭설·한파 등 기상악화 시 도로 순찰을 대비하여 열차 서행·하중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비대응 계획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정책교통정책관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장시간 운전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과"기상 및 도로상황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차량·여객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구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은 10일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2,780만명이 전국에서 이동할 것으로 일 평균 834만 명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하나 연휴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9.3%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14.1% 증가한 525만대로 추산했다. 특히 설 당일인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돼 일 통행량이 작년(554만대)보다 11.0%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15일 오전 귀성은 17일 오후가 최대로 나타나며 이동 시간도 작년보다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 5개 과제를 설정했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km)에 대하여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9개 구간(294km) 운영한다.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21개 구간(2,028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도

시간으로 제공한다. 설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한다.

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했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장애인에게는 주차비를 무료(2월 15~18일)로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T1 2번 출국장 T2 1C·2C·2D출국장)을 통해 여권·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차량·여객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구

## 도의회, 설 맞이 장보기 행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0일 군산 주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군산14)을 비롯해 김동구 의원(군산22), 박정희 의원(군산3)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나서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e-커머스 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생필품 등을 구매해 군산 지역 사물창고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1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0일 군산 주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 6월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 “정읍에 반도체 공장 유치” | 김재선 덕산그룹 회장, 시장에 도전

김재선 덕산그룹 회장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선거에 정읍 시민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회장은(64)은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경영 35년, 정당활동 4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현장형 전문가로서 시민후보로 정읍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온 경제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정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정치와 경제, 두 날개로 정읍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민당, 평민당 개혁당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45년간 당원으로 활동해 온 정치 경력을 갖고 있다.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풀뿌리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김재선 덕산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후보로 정읍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와 '노사모 정읍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중동 경제사범 현장에서 근무한 산업 역군 출신으로, 1991년 정읍 고부농공단지에 덕산엔지니어링(주)을 설립했다.

현재 3급 기업인으로 4개 회사를 운영 중인 현장 실용경제 전문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어느 정당의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정읍 시민의 경제적 이익만을 비호하는 시민후보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탁상행정인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며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뛰는 시장이 되겠다"

고 다짐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8년 임기 동안 정읍 인구 15만 명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날 1호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2호부터 6호까지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정읍 응동면 오성리 제네부라 출신으로 만학으로 전북 과학대학교 경영세무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전북생환추진위원회 부회장 전북장애인문제연구소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1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신순철 동학혁명기념재단 이사 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촉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동학농민혁명 2차 붕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이사장은 2차 붕기 항일 저항 운동이라는 점이 학술적으로 입증됐음에도 1982년 제정된 내규 등을 이유로 서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면서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068명으로, 이 중 후손이 확인된 2차 붕기 참여자는 494명이다. 이들은 모두 문헌 고증과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예우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독립운동 사례와의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1만호 기자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이 열린 가운데,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채상훈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반도체, AI 시대 떠받치는 기술인프라

### 전북 백년포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채상훈 교수 강연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1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채상훈 교수를 초청해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AI 동향 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채 교수는 반도체 전문가로, 2026년 1월 지랑스런 전북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럼에서 채 교수는 반도체 소재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반도체 기술 흐름, 그리고 인공지능(AI) 발전과 반도체 기술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기술적 변화와 향후 방향성을 폭넓게 설명했다. 채 교수는 먼저 반도체 소재의 혁신을 주제로, 트랜지스터 집적도의 지속적인 향상과 무어의 법칙이 반도체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어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 동향으로,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들을 소개했다. 금속 배선의 한계,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 3차원 집적회로(3D IC), 시스템 온 칩(SoC),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반도체 기술의 현황을 조망했다.

또한, 전통적인 중앙처리장치(CPU)와 병렬 연산이 특화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GPU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짚었다. 채 교수는 AI 알고리즘의 특성이 반도체 설계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기술 발전 역시 AI 활용을 전제로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채 교수는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 메모리 병목, 제조 비용과 수율 문제 등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이 직면할 기술적 과제를 언급하며,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컴퓨팅, 광집적회로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컴퓨팅과 플랫폼이 차세대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최백렬 원장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내부의 기술적 구조와 변화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며, "이번 백년포럼은 반도체와 AI라는 핵심 기술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 송곡회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와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1만호 기자

## 도민 맞춤형 정책 발굴

### 민주 전북자치도당, 지선 정책공약개발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공약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10일 2026 지방선거 정책공약개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삶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공약개발 TF는 이봉기 총괄위원(원광대학교 행정전문대학부 교수)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전문자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강화겠다는 설명이다.

TF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피지침 AI, 신재생에너지, K-

컬처 등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연계해 전북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전북형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제안은 TF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다.

운영 일정은 2월부터 3월까지 공약 제안 모집을 진행하고, 4월 주요 공약을 정리한 뒤 5월에는 공약 발표회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는 실질적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현실적 안착 지원

###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현실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동물 학대와 '애니멀 호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보호 동물 수에 따라 2026년 4월 27일까지 단계적으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상당수 민간 보호시설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돼 있어 '농지법' 위반 상태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 농지법 개정 시 제출 복구비용 예치,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만호 기자